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가족구조의 변화와 다원화 사회에 대응한 가족정책의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최근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후기산업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이혼율 증가 등의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핵가족화 및 저출산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세대구성이 단순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족 증가, 한부모 가족의 급증, 재혼가족의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는 가족의 기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 확산, 전통적 성역할 의식의 지체와 세대간 부양 의식 약화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 및 가족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했던 재생산, 돌봄, 복지, 가족교육 등의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은 만성적인 기능적 과부하에 직면함으로써 결혼의 연기 또는 포기, 이혼 증가 등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가족정책을 뒤돌아 보면 급격한 이

혼증가 등 가족해체 양상에 대응하여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도에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족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하에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그간 성과는 가족문제가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모자가정 등 요보호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지적이고 사후적 접근에서 가족가치를 확산하고 가족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후에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법률(2007)」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등 제정을 통해 보편적 가족정책의 틀거리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등 가족가치 확산, 다문화·한부모 등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의 한계 등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기

도 하다.

향후 우리사회의 가족 분야는 결혼 연령의 상승, 독신자의 증가 등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화가 더 심화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면서 가족기능의 공백을 매우기 위한 ‘돌봄(Care)’의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저출산 문제와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족 가치관의 변화, 이혼의 증가, 결혼 이민자 인구 확대 등으로 인한 가족형태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수립·시행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하에, 정책목표를 “개인과 가정의 전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와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에 두고 있다. 정책과제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부담을 강조하고, 자녀의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의 다양화, 다원화에 대응하여 이들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보편적 가족의 가족 위기를 예방하고 가족의 건강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가치를 확산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 분야는 타 영역보다 빠르게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느 시기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화·다원화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해법 또한 사회의 각 분야와 연계·협력을 통한 대응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저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가족의 안전성은 감소하고, 돌봄의 공백, 양육의 부담 등을 우리사회가 더 부담해 나가야 할 것이고, 선택으로서의 결혼과 가족 등 민주적·합리적 가족 가치관 확산에 따른 새로운 전략과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협력할 때 가족의 안정을 통한 밝은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순**